

[종합·해설]

■ “혁신도시 흔들지 말라” 지역민 거센 반발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지역민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결코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출입도로.

■ 혁신도시 토지보상 현황 (단위: 억원, %)

지역	금액	보상협의율	보상개시시점
광주·전남	2977	93.6	2007년 9월
전북	6355	83.7	2007년 11월
대구	5616	67.1	2007년 8월
경북(김천)	2293	94.5	2007년 8월
울산	3725	68.2	2007년 9월
충북	3208	74.8	2007년 10월
경남	2509	83.2	2007년 8월
강원	3096	80.0	2007년 12월
제주	1284	73.1	2007년 7월

(자료: 국토해양부, 부산은 국공유지 매입지 포함) 이므로 보상 불필요

‘균형법’ 손질 저항 불보듯

■ ‘혁신도시’ 향후 전망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국토해양부, 감사원 등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의 축소·변질 등이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15일 혁신도시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을 비롯 이전대상에 포함된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검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93.6%가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등 전국 혁신도시 토지보상 협의율이 78%에 이르는 등 2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수정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박노장 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175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되나=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부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 공동화를 우려해 수도권에 소재한 175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등은 나주 일원에 조성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대한주택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경남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재검토되거나 축소 내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한전 등 이전 거부 빌미 제공할 수도

나주 토지보상금 3천억원 이미 지급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 이미 결정된 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칠 것으로 보여 큰 갈등이 예상된다.

◇ 국토해양부, 혁신도시사업 대안 마련 척수=국토해양부는 15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 자체의 축소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 혁신도시 사업 원점 재검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축소 ▲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 인하 ▲ 주택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촉진 등 다양한 가능성 을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을 수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축소·변질땐 지방 붕괴” 우려 또 우려

사회적 갈등 양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정책 연속성 유지… 제도·시설 적극 지원해야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조성 사업 재검토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궤도 수정에 들어가자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여론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축소 및 변질시킨다면 종양과 지방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역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효과와 인구유입 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단편이라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14일 “모든 신규 사업이 경제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동

안 산업화 세력에 의해 왜곡됐던 국가 발전 축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경제유발효과와 인구유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제도,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실장은 “혁신도시 사업이야말로 지방산업진흥을 위한 유일한 프로젝트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균형발전 성공 동력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 유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재검토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청사 건설에 따른 재원 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물론 교육, R&D 등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 있다”며 “이는 세계적인 주제에 이명박 정부가 이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론을 제기했다. 단순히 재원 문제로 정책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재검토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주 광주시혁신도시 공동지원단장은 “감사원 발표 결과 등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다분히 변질·축소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오히려 지원책을 마련, 혁신도시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93.6%가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등 전국 혁신도시 토지보상 협의율이 78%에 이르는 등 2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수정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박노장 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미심쩍은’ 국토부·감사원 보고서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추진에 앞장섰던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혁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일부 언론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재검토 부추기기 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전면 재검토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도 최근 “혁신도시 사업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아 참여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기획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 보고서=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혁신도시의 조성원자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된 고(高)분양가로

“참여정부 부정 ‘기획감사’ 아니냐” 의혹

인해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43개)에서는 약 2조9천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전 정권에서는 주무 부서로서 왕성하게 추진하던 정책을 정권이 바뀐지 몇 달 만에 뒤집는 자가 부정적 보고서를 작성,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토연구원도 자기 반성(?)=정부의 국토정책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국토연구원도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효과를 선 전하다가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15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로 국토정책의 목표로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감사원도 나서=혁신도시 정책 비판에 감사원도 가세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한 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1조3천억원인 공공기관의 이전 부가가치를 3배 이상 부풀린 4조원대로 발표했다는 내용의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